

사설

교육혁신 비전선포, 소통과 협의 아쉽다

지난 20일, 경희 교육 혁신 비전선포식이 진행됐다. 김진상 총장을 비롯해 학생, 교수, 직원 대표자가 교육 혁신 방안을 두고 의견을 공유했다. 대전공 의무화, 교양교육 개편, 수업 혁신 모델 등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변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관련 부서를 취재한 결과, 비전선포식 발표가 내부적으로 충분한 협의가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날 김 총장은 핵심과제로 대전공 의무화와 교양교육 개편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전공 의무화는 이미 무전공 입학제 도입 이후 불거진 인기학과 쏠림 현상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현재도 경영학과, 미디어학과 등 일부 인기 학과는 전공생조차 수강신청이

어려울 정도로 강의 수요가 포화 상태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공 선택의 문턱을 낮춘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의무화로 생길 수도 있는 수강 불균형은 예상과 다르게 흘러갈 공산이 크다.

인프라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강의실 부족, 강의수 대비 수요 불일치, 그리고 교수진의 물리적 한계는 이미 일부 단과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이날 비전선포식에서 학교 측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온라인 강의 확대'를 해법 중 하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몇 해 전 코로나 시기에서도 보았듯이 온라인 수업은 수업 질 저하, 상호작용 부재, 학습 몰입도 저하라는 다양한 문제점을 수반하기도 한다. 일방향 콘텐츠 소비에 머무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양적 확대 그 자체만으로는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

다는 점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교양교육 개편 역시 충분한 공감대를 얻었는지 궁금하다. 우리 학교 교양교육은 후마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다. 이미 15년 가까이 단과대학 수준의 독립 교양교육 체계를 구축해 온 상황에서, 개편 논의가 후마와의 긴밀한 논의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 이는 구조적 혼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순히 개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것보다, 기존 체계의 성과와 한계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번 선포식은 온라인 생중계를 통해 모두가 시청할 수 있었던 공개 행사였다. 그만큼 정책 발표 내용은 많은 구성원에게 영향을 미치며, 정책 추진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그러나 그 실질적 실행을

책임져야 할 교육혁신추진단은 아직 출범 시기조차 정해지지 않았고, 구성원 또한 미정이다. 방향성에 버금가는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라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는 구성원이 나올 수밖에 없어 보인다.

교육 혁신은 당위로만 실현되지 않는다. '비전'은 선언이 아니라 실천의 방향이어야 하며 그 출발점은 언제나 충분한 공감과 소통이다. 개별 정책이 아니라, 소통의 구조 자체를 혁신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 혁신의 첫걸음일 것이다. 교육과 관련한 대학혁신을 이뤄내겠다는 마음과 의도는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관련 부서, 구성원과 긴밀한 논의 없이 발표된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그 과정을 밟을 것을 희망한다. 그것이 조금이라도 혁신을 앞당기는 기본 순서일테니 말이다.

세시봉

비극의 반복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지속적인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이 벌어졌다. 그런데 이 사건, 꼭 어디서 본 것만 같다. 2023년 서이초등 교사 사망 사건과 오버랩된다. 비슷한 비극의 반복에, 그동안 만났던 스승이 떠오르며 마음이 갑갑해졌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교권 5법'이 개정됐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에서 교사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 민원 응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민원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로부터 약 1년 뒤, 제주에서 또 한 명의 서이초 교사가 발생하고 말았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교권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법을 논하기 전, 교사를 대하는 사회의 시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교사-학생-학부모의 관계는 지나치게 일방적이고 수직적이다. 교사는 학생을 무조건 책임져야 하는 존재로 여겨지며, 교사의 일거수일투족이 '민원'으로 문제 삼아진다. 교권을 논하기 전, 인간으로서의 권리, 인권이 침해당하는 현실부터 해결해야 한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다'는 노래에 역행하듯이, 교사의 인권은 바닥을 치고 있다. 권위를 잃은 교실, 존중받지 못하는 교사, 감정 소진을 당연히 견뎌야 하는 분위기 이런 환경이 반복된다면 교사의 죽음은 유별난 예외가 아닌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다.

대학생인 우리는 이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며 자라왔다. 초등학생 시절, 받아쓰기를 60점 이하로 받으면 방과 후에 친구들과 틀린 문장을 다시 썼던 기억이 있다. 괴롭다면 괴로웠겠지만 절대 선생님의 학대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런데, 오랜만에 찾아본 담임 선생님은 "요즘엔 어떤 일이 있어도 학생에게 나머지 공부를 시키지 않는다"고 말했다. 선생님께선 "민원이 될 만 한 일은 되도록 피한다"며, 5학년임에도 구구단을 외우지 못하는 아이를 안쓰럽게 바라만 보셨다.

교권의 정의를 다시 써야 한다. 교사는 교사이기 이전 인간으로, 보호받아야 할 인격체다. '교권 회복'은 더 이상 법 제정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법 다음의 변화다. 교사의 인간적인 경계가 존중받는 사회. 그것이 교권 회복의 진짜 시작점이다.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 서울캠 축제 입장 논란

안전과 즐거움, 그리고 존중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주 서울캠 축제가 막을 내렸지만, 많은 학생에게는 아쉬움과 불편함이 뒤섞인 기억으로 남았다. 특히 총학의 현장 대응 방식은 곳곳에서 혼선을 낳으며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축제 첫날, 아티스트 공연이 한창일 무렵 노천극장 내부에는 빈자리가 꽤 보였다. 그럼에도 극장 외부에는 입장을 시도하다가 발길을 돌리는 학생들의 줄이 이어졌다. 화장실 등의 이유로 잠시 자리를 비운 학생들조차 재입장을 거부당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총학은 예년과 같은 매뉴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남은 좌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할 수 없었던 점은 공감하기 쉽지 않다. 총학은 혼선의 원인으로 도장 부스 운영을 들었다. 도장 확인을 통해 입장하는 방식이었지만, 부

스 마감이 너무 일러 입장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총학은 이후 "첫날 도장 부스 조기 마감은 실수였다"고 인정하며, 둘째 날부터는 인원 변동에 따라 도장 부스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수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사전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쉽다.

둘째 날 역시 상황은 크게 나가지 않았다. 다시 인파가 몰렸고, 이때는 퇴장 인원만큼 신규 입장을 유도하는 방식이 요구됐다. 그러나 총학은 "인파 관리에 시간이 소요돼 즉각적인 입장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매뉴얼을 수정했다고는 하나, 입장과 퇴장을 조율할 인력 배치와 체계가 미흡했던 셈이다.

학생이 축제에 기대하는 것은 단지 유명 아티스트의 공연만이 아니다. 질서 있고 매끄러운 운영, 그리고 구성원을 존중하는 태도가 함께할 때 진정한 축제의 의미가 완성된다. 이번 축제를 계기로 현장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안전과 축제의 즐거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총학이 되길 기대해본다.



만평 학생들은 빈자리가 있어도 입장할 수 없었다.

교사 문화세계의 창조
교원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

발행인 김진상 | 편집인 남윤재 | 편집장 하시연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서천동) Tel 031-201-3230~2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khunews
이메일 khunews@khu.ac.kr
제작 | 인쇄 아이피디